

군산·통영지역 GM·성동조선 협력사에 1300억 특별보증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금융지원대책 관련 유관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 금융지원 유관기관회의 기존 보증·대출 만기 연장키로

정부가 한국GM, 성동조선 등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금융 지원대책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우선 관련 지역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이 사용 중인 기존 보증과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6년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과 작년 군산지역 지원 당시 기존 자금지원 연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주내 대출 만기 연장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군산·통영지역 한국지엠(GM), 경남지역 성동조선해양 협력업체 등의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자금은 금융위가 1000억원을 부담하고 중소기업벤처부가 300억원을 부담한다.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은 적시에 신규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보증조건 등 조만간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이 활용하던 기존 자금 만기를 연장조치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참여하는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새마을금고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융지원과제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협력업체 등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장 임용' 길 넓힌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 교육경력 15년 교원 임용 확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형공립고와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에서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이끌도

록 지난 20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신청 학교 15% 이내 제한에 따라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작년 3월 기준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56개교(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교육부는 15%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 신청 학교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지만, 교육계 일부 의견을 수렴해 50%까지로 절충안을 낸 셈이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해 다양한 학교 구성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 학교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과 심사의 공정성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등 교육계 의견을 종합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장공모제의 본래 제도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확정했다"며 "향후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교총과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모두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전문성이나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비유를 확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전교조는 "교육부가 100%에서 50%로 확대 폭을 줄인 것은 기득권 세력에 휘둘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용수 기자 hys@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 투자예산 확대

정부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연구개발(R&D) 투자 예산 비중을 현행 30%에서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 과정에서 외부기술 도입 시 기업이 출연금에 매칭해 부담하던 현금비율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주)고엔테크놀로지에서 열린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산업기술 R&D는 개별 기업이 원하는 요소기술 확보 중심으로 치우쳐 민간 R&D 영역과 일부 중첩된 측면이 있고 사업화보다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중점을 뒀 '선 연구개발 지원, 후 제도개선' 관행이 지속돼 신산업 창출 가속화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혁신방안은 예산투입의 전

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R&D 과제관리 시스템 혁신, 산업기술 산출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우선 산업정책 방향에 따라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올해 30%에서 5년 후인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세부적인 전략제품 및 서비스 발굴 후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체 산업기술 R&D를 포괄하는 종합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혁신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점 산업분야별 빅데이터를 축적·공유·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플랫폼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R&D 지식플랫폼을 구축해 R&D 주요과정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연구수행자간,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자

현행 30%서 5년내 50%로 산업부 'R&D 혁신방안' 발표

간 정보교류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술 R&D 과제관리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수의 최고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Buy R&D'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술 도입 시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인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로 완화하고 완화된 현금비율은 현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의 융합 및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해 신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리야드 경제기획부에서 알 투와즈리(Mohamed Al-Tuwairji)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백운규, 사우디서 韓원전 세일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막서 성공적 UAE 원전 건설 추진"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사우디를 찾아 원전수출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산업부는 백 장관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우디를 방문해 알팔레 에너지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과 잇따라 만나 원전수출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비전2030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백 장관의 사우디 방문은 올 3~4월로 예정된 사우디의 원전사업 예비사업자 선정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를 총력 지원하면서, 사우디가 야심차

게 추진하는 '비전2030 협력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백 장관은 알팔레 에너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간의 풍부한 원전 건설 및 운영경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 국제적으로 입증된 기술적 안전성 등을 토대로 사막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UAE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사우디 비전2030 협력사업과 관련해 한국이 사우디 경제개혁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장관은 올해 중 제2차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성과사업 발굴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이달 14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부여, 교육실시기관 지정, 동물용의약품(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운영 등이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목 허가 시 제출되는 안전성·유효성 시험 성적의 신뢰성 확보와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동물임상시험 또는 비임상 시험 실시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준수사항 등을 마련했다.

또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관리자 및 도매업자 관리 등에 대해 연 8시간 이상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했다.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단계 품질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유통품질관리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협회 및 업계 등과 협조해 세부 운영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